



인권재단사람

농촌+면 단위+환경취약지역+주민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환경피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촌마을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1년 11월



예살홍성화환경운동연합 · 환경피해기록단

이 조사보고서는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촌지역+면 단위+환경취약지역+주민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농촌 면 단위 환경취약지역 주민인권 실태조사 취지

‘환경피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촌마을들’ | 4

조사방법 및 특이사항 | 6

환경취약지역 조사 및 주민 인터뷰 내용

- 삽교읍 효림리 | 8
- 대술면 채석단지 | 19
- 고덕면 산업단지 등 | 32

조사 결과 주요내용

- 주민들의 목소리로 확인하는 환경문제, 그리고 인권과의 연결성 (정수연) | 43
-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 심리적 어려움 분석 (이은정) | 46
- 환경취약지역 세 마을 공통점 및 시사점 (신은미) | 51

전문가 의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백도명 /
농촌지역 소규모 오염시설의 현황에 대한 판단과 관리상의 문제점 | 61
-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 땅을 지키는 농민들의 싸움 | 72

“우리는 왜 농촌+면 단위+환경취약지역+주민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나”

환경피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촌마을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창립했다. 충남도청이 예산과 홍성 중간인 내포에 위치하게 되면서 공통의 환경현안이 생겼고 또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하지만 단체를 만들면서도 작은 농촌지역에 무슨 대단한 환경문제가 있겠나 싶었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주민들의 환경감수성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정도가 당시 활동가로서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환경연합 창립 이전부터 있었던 지역현안인 예산 꺾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그간 대다수의 시민들, 특히 도시민들이 접했던 쓰레기문제 담론은 ‘쓰레기를 줄이자.’,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자.’ 정도. 하지만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아니 달랐다고보다 그간 사회가 쓰레기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고, 쓰레기 발생이 아닌 처리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만든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의 논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하겠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나중에야 알게 되고 땅을 파니 마니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법은 법대로 집행되고 주민 갈등은 갈등대로 깊어져갔다. 3만 평 규모 돛형태 폐기물매립장이 생기고 하루 수십 대 트럭이 마을 산을 드나들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쓰레기들을 실어나른다는 계획이었다.

9년여의 싸움 끝에 다행히 폐기물처리장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주민들은 시름을 덜었지만, 10년 가까이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생업을 뒤로 하고 법원을 따라다니고 집회를 한 주민들의 ‘고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 마을이 나뉘고 주민들이 속병이 난 이 과정에 대해, 농촌에서 7년 가까이 활동해온 환경단체 활동가로서는 단순히 ‘고생’이라고 뭉뚱그릴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자랐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5년 넘게 운영된 석산이 규모를 확장하고 기간을 연장해 채석단지로 허가될 때도, 기존의 산업단지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고 할 때도, 주민들이 수년 째 난청과 두통을 호소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헬기정비공장을 마주할 때도 똑같은 분노가 치밀었다. 인구 3천 명 정도가 사는 면 단위 농촌마을에 대규모 환경오염시설이 3, 4개씩 줄줄이 들어서는 것은 농촌을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도시를 위해 존재하며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식민지로 인식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지역의 수많은 환경현안을 접하고 대응하면서, 주민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되지 못하고 지방의 농촌마을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물과 공기, 땅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되게 되었다.

조사를 하는 중에도 홍성군 결성면에는 미군기지 오염토를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고 장곡면에는 골프장 조성 소식으로 술렁인다. 산업단지가 지역 개발과 주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 주민들이 추가조성을 반대하며 일년 가까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예산에는 또다른 투기성 자본이 될지 대규모 토목공사가 될지 산업단지를 빙자한 폐기물처리장이 될지 모를 산업단지 계획이 버젓이 이야기된다. 주민들은 또다시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서둘러 저녁을 먹고 대책회의를 연다. 군청엘 찾아가야 하고 당장에 현수막도 걸기로 한다. 유래 없는 가을장마로 많은 논에 병이 들고 사과는 ‘깎’이 나지 않아 수확이 더뎠다는 와중에 마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다. 농촌의 인력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아픈 사람만 늘어난다. 안그래도 어려운 농촌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더해지니 농촌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

이 조사보고서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염시설로 고통을 겪는 작은 농촌마을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단순한 환경민원’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에의 호소’로 읽혔으면 한다.

2021년 가을,

환경피해기록단

조사방법 및 특이사항

농촌지역 면 단위 환경취약지역 주민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에서는 환경현안이 있는 예산의 3개 지역(고덕, 대술, 삼교)을 선정하였다. 지역조사와 인터뷰를 위해 환경연합 활동가 1인, 심리상담전문가 1인, 기록활동가 1인이 ‘환경피해기록단’을 구성하였고, 모든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였다.

5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사전조사와 공유, 조사의 틀을 결정했다. 7월에는 3개 지역 현장조사와 중간평가회를, 8월과 9월에는 주민인터뷰를 진행했다. 10월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1월에는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이 고령이고 혼자 인터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는 그룹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3개 마을 인터뷰내용 일부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었고, 대술(채석단지)의 사례에는 인근 홍성군 갈산면 석산 사례를 추가했다. 조사와 인터뷰는 모두 실명으로 정리했으나, 본 보고서에는 마을이름, 경우에 따라 성씨, 나이만 표기하고 중복되는 인터뷰내용은 여러 번 적지 않고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하였다. 인터뷰는 마을별로 최소 2차례씩 진행되었으나, 1, 2차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뷰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황 소개를 위해 동영상 등 관련 자료 목록을 첨부하였고 일부는 보고서에 그대로 실었다. 지역언론에서 그간 꾸준히 환경현안을 다뤄서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기사목록과 링크도 골라 실는다.

현황 조사와 인터뷰어 연결 등 전체적인 진행은 신은미 환경연합 활동가가, 인터뷰 주민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은정 열림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이, 인터뷰 기록 및 정리는 정수연 ‘끝 미디어’ 활동가가 역할을 나눠 진행했다. 환경피해기록단이 다 담아내지 못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인권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들의 서면 자문으로 넣었고 조사내용 발표회에서 의사,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영상기록은 지역 영상활동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많은 주민, 활동가 등이 이 조사를 지지하고 지원했다.

본 조사보고서는 인쇄하여 3개 지역 현안 관련된 행정기관과 중앙부처, 지역 군의회와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PDF파일로 제작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할 예정이다.

① 삼교 효림마을

삼교읍 효림리 조사 개요

삼교읍 효림리의 환경문제는 2018년 1월 효림리 주민 홍00 님이 환경운동연합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수차례 조사와 방문, 주민면담을 통해 헬리콥터 정비공장뿐 아니라 삼교역(소음), 컨테이너 물류 하치장(분진), 산업단지(유출사고) 등으로 마을이 둘러싸여있고 장기간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주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주민이 대부분 고령이고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해도 반영되거나 개선되는 일이 없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다.

효림리 북쪽으로는 유아이헬리콥터, 남쪽으로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서쪽으로는 삼교역사와 삼익물류가 위치해있다. 특히 1988년부터 운영 중인 헬리콥터 정비공장은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도 되지 않으며, 마을(농지)과 완전히 면해있다.



인터뷰 농가



최근 폐암, 폐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

헬리콥터 정비공장

헬리콥터정비공장이 울타리 하나를 두고 마을과 면해있고 주거지와도 가까움. 헬리콥터정비공장이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장치도 없음. 매연,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각하나 그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공문도 수차례 넣는 등 10년 넘게 구제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었음. 농사일을 하다가도 헬기가 뜨면 도망치듯 대피해야 하고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정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함.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업자는 곧 서산공항으로 이전할 거라고 얘기로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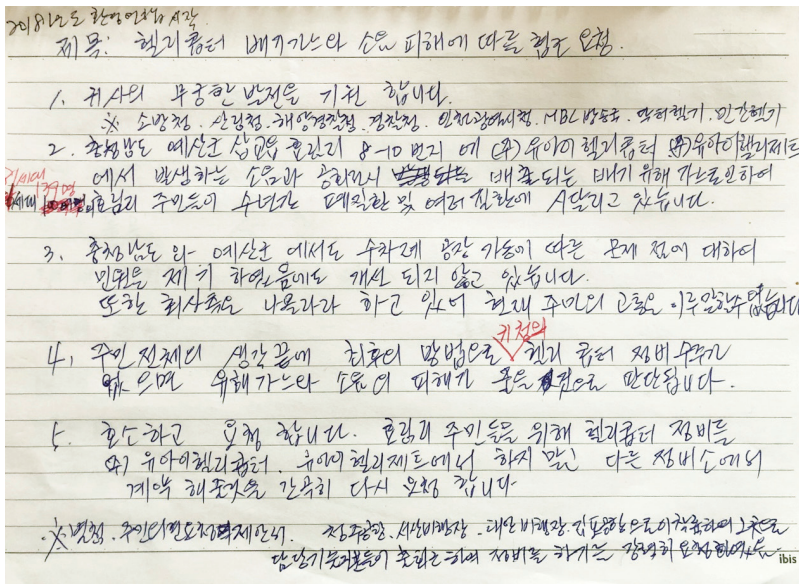


그림2. 주민들이 국가기관으로 보낸 협조 요청사항 주요내용

삼교역

2008년 삼교역이 현재 위치(효림리)로 이전했으나, 방음벽이 없는 상태. 하루 28대의 여객열차, 13대의 화물열차가 운행됨. 시간당 2대 이상이 마을을 지나가며 소음을 발생시키지만, 시설설치기준 미흡, 소음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컨테이너 물류센터 (00물류, 000로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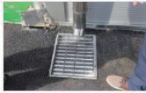
삼교역사에 위치한 컨테이너 물류센터도 소음과 대기오염의 문제를 일으킴. 특히 컨테이너 상하차 시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이는 강우 시 배수로나 정화시설이 없이 농지로 유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최근에만 해도 기름 유출, 유해물질 배출 등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음. 지난 8월에도 4000리터 가까이 기름이 유출되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다른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하천과 농지 오염이 우려됨. 사고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의 환풍기 소음이나 야간 물류 상하차작업으로 일부 주민들은 불면을 호소함.



예산일반산업단지 주변 하천 기름유출 경찰 수사
예산군, 첫 발견 보름 뒤에야 조사... 주민들 "지하수 오염 걱정... 범인 잡아야"
김수로(trfh2944) | 2021.09.07



시골 마을 기름 유출, 탐사용 로봇 동원해 근원지 밝혀
기름 유출한 H업체 "고의성 없다" 주장
이재환(fanterm5) | 2018.09.07



상습적인 기름 유출... "기름 성분 분석해서 근원지 확인해야"
예산군 삼교읍 효림리 기름 유출 사고... 주민들 군청에 원인 규명 요구
이재환(fanterm5) | 2018.09.05



비만 오면 샅강에 기름띠가... '고의로 유출했다' 의혹 제기
예산산업단지 인근 주민 제보... 산업단지 측 "바닥에 있던 기름 우수관로로 유입"
이재환(fanterm5) | 2018.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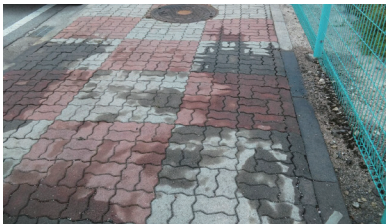


그림4. 기름 유출 사고로 얼룩진 산업단지 인근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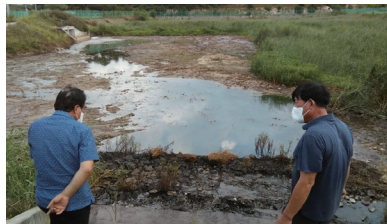


그림5. 산업단지 기름 유출로 농경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

효림마을 주민인터뷰

- 1차 마을방문 및 현지조사 :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 2차 심층 그룹인터뷰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김00 님 (70대 남성) : 헬기공장 시작할 때부터의 사정을 아는 주민

“열차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 브레이크 소음과 냄새 때문에 두통이 말도 못해. 컨테이너 하역할 때 소음, 헬기장 가스, 헬기 소음. 그리고 우리집 가까이서 헬기 도색 벗기고 분쇄해. 메리야스를 옥상에 올려놔 봤는데 그 도색 벗긴 가루가 날라 3일만에 메리야스 전부 덮였어. 기름 유출된 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했어. 두 번째 유출사고, 몇톤으로 추정되는데 조치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경찰조사 요구해서 행정 이 움직였어. 눈에 물을 댈 수가 없어. 답답해. 88년도 공장 시작할 때 헬기 부품공장으로 안내하고 주민들 수십명 취업시켜 준다더니 취업한 사람 한명도 없고 허가 받은 후 헬기 수리장으로 변경했어. 얼마 전까지 방위산업체라서 군용헬기 많이 다녔고, 한동안 마을 행사시 20만원, 30만원(1년) 찬조금도 주더니 언젠가부터 그것도 없어. 소음 때문인지 귀가 잘 안 들려서 다들 목소리가 커. 이런 생각하면 성질나서 욕하고 쫓아가게 돼. 혈압 올라.”

홍00 님 (60대 남성) : 사과과수원이 헬기공장에 붙어있음.

“간암으로 얼마 전 수술 받고 다시 살아났어. 제2의 인생. 지하수를 식수, 농업용수로 사용 중. 민원 올린 지 수년째지만 해결되지도 않고 국가기관에 의해 주민이 아픔을 겪고 있어. 주무부서는 피해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킨다더니. 국가 행정은 주민이 아플 때 보살펴야지. 수십 년째 답이 없어. 이주 가능할 텐데... 농사짓다가 가스 유출되면 당장 자리를 피해. 일꾼 얻어서 사

과 따다가도 헬기 뜨는 거 보면 대피해야해. 바람이 불면 더 더워. 공기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행정, 업체).”

박00 님(80대 여성) : 헬기장 옆 과수원 아랫집. 효림리에 65년 거주.

“공장 불빛이 밤새 켜있어서 집 앞이 24시간 환해 낮같아. 옛날에는 헬기장, 공장 있던 자리가 다 과수원이었어. 매년 마을모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했어. 모임할 때마다 주민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이사 가고 아픈 주민과 그 가족들 참여 못하게 되고… 아들도 죽고, 나도 뇌경색 증상이 있고 얼마 전에는 병원에 입원도 했었어.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러려니라고 살아야지 어떡해.”

나00 님 (80대 남성) : 회관 바로 아랫집, 농지가 헬기정비공장과 붙어 있음.

“일주일동안 순천향 병원 입원했었어. 일하던 중 어지럼증으로, 지난해에는 어지럽고 구역질 나서 쓰러질 지경이었어. 머리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 밭이 헬기공장과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서 경계지역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대나무가 농지를 침해하고 그늘져서 농사가 잘 안 돼.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밭에 가고 싶지가 않아.

동네가 비고 있어. 조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 데모를 해야되나 생각도 들고…, 화가 많이 났어(눈물). 너희들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야. 녀들은 개돼지다 그러는 거지.”

노00 님 (80대 여성) : 헬기정기공장 가장 가까운 집. 64년 거주.

헬기정비공장 매연이 주로 우리집쪽으로 와. 기름냄새, 태우는 냄새가 무척 나. 남편은 한참을 어지럽다고 하더니 작년에 죽었어. 나는 허리, 다리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해. 갑자기 숨이 가빠져서 자식들이 텃밭도 못하게 해. 생활은 농사도 다 포기하고 말로 다 못해. 남들 일하는데 돌아다니기 어려워. 지팡이 잡고 동네 가끔 돌아다니고 주로 집에 혼자 있어. 그나마 자식들이 자주 왕래해. 남들은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난 그렇지 못해. 그냥 살지.”

박00 님 (80대 남성) : 노00 님의 남편

“헬기공장 옆에 살아. 숨이 가쁘고 가래가 심해 약복용 중이야. 동네가 온통 시끄러운 소리야. 여객용 말고도 화물기차가 지나가는데 화물기차는 20량 이상 달고 가. 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사는 재미가 없어.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지.”

30년 간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삽교 효림마을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마을 주민들입니다. 이곳은 86세대 100여 명이 조금 넘게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민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 지금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두 분 이상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난청과 두통, 호흡기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누고 꼭 해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8-10번지에 '000헬리콥터'라는 헬리콥터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1987년에 개업해 지금까지 30년 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헬리콥터 조립공장으로 시작을 했고, 마을주민들도 나랏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겠거니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헬리콥터 정비로 업종을 변경해 수시로 헬리콥터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닥터헬기, 소방헬기, 산림청헬기, 경찰청헬기, 해양경찰청헬기, 해군헬기 등 관용헬기를 비롯해 민간헬기들까지 전국의 모든 헬기가 이곳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불문이라 어떨 때는 수도권 쪽에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라도에서 오기도 합니다. 헬리콥터 정비를 할 때는 수 시간 공회전 및 시운전을 하는데, 어떨 때는 밤낮 없이 며칠씩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정비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장 공터에서 하다보니 헬리콥터에서 뿜어대는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가 그대로 마을로 옵니다.

마을에서 사과과수원과 논, 밭일을 하다가도 정비가 시작되면 다들 숨을 쉴 수 없어 대피하듯 일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문이 나다보니 일꾼들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헬리콥터 도색(샌딩)을

할 때 나오는 역한 냄새와 분쇄폐기물은 공기 중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빗물과 함께 농지로 들어오기도 해서 공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을 지형상 북서풍이 불면 모든 오염물질이 마을 안으로 모이고 한동안 정체됩니다. 실제로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나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마을 산등성이에 거주하셨습니다. 닥터헬기가 생명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닥터헬기를 정비하면서 또다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겠거니 하고 20년을 참고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군청, 도청 등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담당부서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며 외면만 당했습니다. 군청 환경과에 얘길해 담당자들이 실사를 왔다간 적이 있지만, 헬리콥터 정비하는 걸 보고 질겁을 하고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논의가 진척되려고 하면 담당자가 변경되어 해결은커녕 처음부터 다시 하소연을 해야 하는 힘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공장에 문제제기를 해도 미안하다는 답변은커녕 대표자는 주민들에게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곧 이전할 거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희망으로 생각하고 견디어보자 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니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30년 간 온갖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와서까지 우물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가 들어서고 삼교역이 가까워 사람들이 선호할 만도 한데 오히려 지가는 하락하고 땅을 보러온 사람들은 헬리콥터 정비공장과 그 외 오염시설을 보고 돌아섭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걸 어렵다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밝히려는 겁니다. 주민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또 지금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장은 지금 이전하기 전이라도 소음이나 매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상 헬리콥터 정비공장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는 명백하지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병이 드러난 주민들을 중심으

로 피해를 얘기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간의 축적된 오염으로 건강피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 대상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1년 사계절의 이상의 소음이나 매연, 미세먼지를 측정해 피해를 증명했으면 합니다.

헬리콥터 정비공장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효림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오염배출시설이 많습니다.

효림마을에 있는 삽교역으로는 거의 한 시간에 한 대, 상행과 하행을 합치면 한 시간에 두 대의 열차가 정기적으로 지나가는데, 삽교역은 방음벽도 없습니다. 열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역 주변 배수로도 갖춰지지 있지 않아 비가 오면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논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역사 이전하기 전엔 많던 물고기들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삽교역에는 00물류와 00로직스 컨테이너 상하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소음이 하루 종일 발생하고 컨테이너 도색작업으로 역한 냄새가 납니다. 크레인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도 대단합니다. 한쪽에는 현대제철 환풍기 소음까지 있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언론에서 와보고는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냐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곳들 모두 헬리콥터 정비공장 못지않게 대기오염과 소음이 대단하지만 기준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제재할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 째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아니면 대기오염과 소음이 계속되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오히려 기준치나 법적 제재가 허술해 주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면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효림마을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헬기정비공장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컨테이너물류창고에서 분진이 날아듭니다. 대기오염이 아니어도 사방에서 소음이 들려옵니다.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난청에 청력 저하까지 있고 나이드든 어르신들까지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논밭을 가꾸며 묵묵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이런

오염물질과 질병이라니 억울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 제기와 해결 시도가 없다면 앞으로 남은 생은 더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숨 쉬지 못하고 늘 시끄러운 소음공해 속에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 인권 침해입니다. 30년 동안 소음과 매연에 시달렸으니, 이제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년 7월 4일

예산군 삼교 효림마을 주민 일동

삽교 효림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자료목록

- 국민신문고 청원내용 (첨부)
- 암으로 인한 사망자 명단
- 헬리콥터 정비공장 영상 (주민 촬영)
- 충남환경이슈 1탄 : 예산군 효림리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https://www.youtube.com/watch?v=_3l08hmSTCo
- MBC 시사플러스 <청정 장수마을 옆, 주민건강 해치는 헬기정비공장> (2018년 6월 25일)

효림리 문제를 다룬 언론기사 목록

- <헬기공장 주변 주민들 "소음·매연, 폐암환자 증가" 역학조사 요구>, 2018년 2월 14일, 오마이뉴스
-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로 이중삼중 고통... 역학조사해 달라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주민들 방송에 호소>, 2018년 6월 14일, 오마이뉴스

② 대술면 채석단지

마을조사 개요

대술면은 2011년부터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로 10년 가까이 고통을 겪은 곳이다. 대술면 궤곡리는 3만평 규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마을 산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주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서명운동과 집회, 면담 등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막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마을기금을 마련해 행정소송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때마다 버스를 두세 대씩 대절해 주민들이 대전 법원을 찾았다. 대법원까지 간 불승인 취소 행정소송은 패소했지만, 10년여의 싸움 끝에 다행히 허가 취소되었다.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주민들은 혹여나 부정탈까,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까 걱정돼 승리와 안도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

궤곡리와 면해있는 시산리 일대는 2005년부터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채석단지가 있다. 두 차례의 연장 허가로 2021년까지 15년 동안 영업을 했으나, 2015년 영업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채석단지 허가를 통해 204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음과 미세먼지, 진동 등으로 그간 피해를 본 주민들은 채석단지 지정에 반대했으나, 마을산이 팔리게 되고 사업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구당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채석단지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술면은 주요 현안인 폐기물처리장과 채석단지 이외에도 연탄공장, 레미콘공장, 비닐재활용공장 등의 설치문제로 계속 현수막이 걸렸던 지역이다. 특히나 주민들은 채석단지가 또다른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술면 궤곡리가 비오 톱 1, 2등급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운영 중인 석산과 주변의 오염시설들로 인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결했다.

(단)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석채취장(서쪽 약 800m 거리), 골재생산장(서쪽 약 300m 거리), 폐비닐재활용공장(남서쪽 약 600m 거리), 축사(남동쪽 약 600m 거리), 토사채취장(동쪽 약 400m 거리), 공동묘지(동쪽 약 1.5km 거리), 축사(동쪽 약 1.5km 거리)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토석채취장, 골재생산장, 폐비닐재활용공장, 축사, 토사채취장, 공동묘지 등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위 토석채취장은 그 면적이 25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인바,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은 일정 수준 이상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연환경영향평가(대수층)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2심 판결문 중에서



그림10. 2019년 산림청 앞 채석단지 반대 집회



그림11. 곶곡리 환경오염시설 반대 현수막

대술 환경문제 연표(채석단지를 중심으로)

- 2005년 토석채취허가, 2008년 1차 연장, 2012년 2차 연장
- 2011년 5월 대술면 꺄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논란 시작
- 2011년 6월 대술면 꺄곡리 마을주민 탄원서 제출(환경부, 충남도청, 예산군청)
- 2011년 6월 꺄곡리 이장 해임결의 및 해임청원서 제출(대술면)
- 2015년 (주)000 산림청에 채석단지지정 신청
- 2016년 2월 연탄공장 허가 신청
- 2016년 3월 레미콘공장 허가 신청
- 2016년 11월 대술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들 결사반대입장 표명
- 2016년 12월 대술면 주민들 예산군청 앞 피켓시위
- 2017년 2월 시산리 마을 대동회에서 마을소유 산지 매매의 건 부결
- 2017년 4월 시산리 소유 산지 (주)000에 매매, 주민과 석산업체 간 합의서 작성
(민원제기 불가 조건), 일부 주민 반발(7가구). 보상금 포함한
매매가 25억 원 (시산리 주민 가구당 29백여 만 원씩 분배)
- 2017년 5월 시산리 주민 충남도청 앞 1인시위
- 2017년 7월 시산리 주민들 산림청 앞에서 채석단지 지정 반대 집회 개최
- 2017년 7월 시산리 주민,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작성한 합의서에
문제 제기, 산림청 앞에서 단식투쟁
- 2019년 1월 채석단지 지정 반대를 위해 국민청원
- 2019년 2월 채석단지 지정 반대 산림청 앞 집회
- 2019년 2월 채석단지 지정 허가
- 2019년 4월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 2019년 4월 예산군 산림과 채석단지 1차 신고 수리

채석단지

2005년 석산개발 시작 후 발파소음, 분진, 농작물피해,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피해 계속되고 있음. 2018년 현재 70여명의 주민 중 암환자 13명. 발파 및 파쇄, 이동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미세먼지 피해는 물론 사과, 배 등 농작물에 돌가루 앉아 상품성 하락,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 대형트럭 통행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피해, 도로 파손으로 농작업 차량 통행 및 보행 어려움. 산지훼손으로 인한 환경, 경관 피해. 보상금 지급 조건 등으로 합의 중용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간 갈등 유발. 2020년에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있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는 단지 내 사고로 인해 중상 및 사망 사고 있었음.

주민인터뷰

- 1) 마을방문 및 현지조사 : 2021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 2) 전화인터뷰 : 2021년 8월 25일(월) ~ 31일(화)

최00 님 (60대 남성) : 채석단지 반대에 앞장섰던 대술 주민

“대술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채석장 운영이다. 주민들이 열심히 나섰지만 채석단지 가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더라. 군청에 민원을 더 넣었어야 한다. 이렇게 피해가 많으니 군청이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한다. 행정과 사업자는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지만,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발파로 미세먼지 피해는 생긴다.

지역사회에서 보상금 문제가 있으니 동네 사람들끼리도 안 좋아졌다. 시 산리 1구는 두어집 안 받고 보상 다 마쳤고, 시산리 2구도 4, 5년 전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다 받았다. 꺾곡리 2구도 일부 받았다고 한다.

다 지난 일이지만, 이 (반대)싸움에 대한 회의를 든다. 대술 주민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스스로 채석단지문제에 대해 마음이 닫힌다. 보상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대술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처지인가. 채석단지가 연장 허가가 났고, 이 보상은 과거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보상금이 과거를 다 보상할 수도 없지만,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피해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다.”

전화인터뷰 주요내용

채석단지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인터뷰하기 위해 채석단지 인근 주민 이 00 님(채석단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피해를 보고있는 과수농가), 박00 님 (10여 년 전 이사와 살고 있는 40대 여성), 김00 님(시산리와 면한 궤곡리 주민. 발파로 인한 진동,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70대 남성) 님을 인터뷰하려고 했으나, “다시는 채석단지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당연히 반대해야할 일이었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다.”,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혼자 반대하는 것도 힘들고 다들 합의를 한 상태에서 곤욕스럽다. 이야기 자체가 조심스럽기도 하다.”, “다 지나간 일을 얘기해서 뭐하나. 이미 허가난 걸 되돌릴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채석단지뿐 아니라 어떤 지역일에도 앞장서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꺼려해 주민인터뷰는 무산되었다. 대신 채석단지 가까이 사는 주민의 자제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00 님 (여/40대 여성) : 대술 궤곡리 주민의 자제분

“축사가 많아 하천 오염 돼서 거의 똥물이야. 파리가 많아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꿈도 못 꿬. 채석단지 있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듯. (최근 승소는 했지만) 궤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부지, 농은리부터 채석단지 사이에 공장들이 많이 늘었어. 친구들이 태어난 곳이니깐 귀향하고 싶어 마을 안부를 물어오곤 하는데 주변 환경오염 이야기 듣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 종종 있어 안타까워. 친구와 함께 노년을 보내면 좋을텐데...”



채석단지 모니터링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7시 ~ 오후 1시

- 채석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들이 채석단지를 모니터링하며 동영상으로 기록. 토석을 실은 트럭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7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모니터링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함.

동영상 링크 : <그녀들의 피크닉, 대술 채석단지를 가다>

<https://www.youtube.com/watch?v=nYZB3fkwKfl&t=54s>



그림14. 단양의 채석장 사례 ©시사N 조남진



그림15. 홍성군 갈산면 석산 (사진 : 길익균)



그림16. 갈산면 석산 작업장 침전조



그림17. 갈산면 석산 아래 저수지

생존권 위협하고 주민 기만하는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철회하라!

건강과 환경, 재산권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산림청은 삼표기초소재(주)의 예산군 대술면 채석단지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아울러 지난 해 10월 예산군은 채석단지 지정 심의 과정에서 산림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4월 12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채석단지 1차 신고를 수리했다. 산림청의 신고 수리 조건 22개 항목이 어떻게 보완되고 검토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주민들은 15년 넘게 돌가루와 소음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구제는 커녕 체계적인 조사와 면밀한 검토 없이 채석단지를 허가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순처럼 절차를 밟아가는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생명과 맞바꾸는 처사이다.

2005년 본격적인 석산 개발 이후 인근 주민들은 발파 소음, 돌가루 비산, 분진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변 농지와 농산물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 대형트럭 통행으로 인한 먼지, 소음, 타이어 마모 분진 등으로 보행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가 하락 등 재산권이 피해, 산지훼손으로 인한 경관 피해도 있다. 석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각종 오염원이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진동에 의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도 우려된다. 인근 약수에서는 비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채석단지 지정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개발행위가 확대되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채석단지는 대술면뿐 아니라 예산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된다.

지난 4월 8일 대술면을 비롯한 예산지역 사회단체가 연대해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채석단지 대책위)를 출범시킨 바 있

다. 채석단지 대책위는 1) 채석단지 허가 과정의 총체적 부실, 2) 주민과의 협의과정 없이 진행된 신고 수리, 3) 그간 석산의 개발행위와 주민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4)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어야 채석단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또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채석단지 대책위는 주민들의 타당한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채석단지 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반대투쟁을 통해 채석단지 지정을 철회시킬 것이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마을을 파괴하고 있는 기존 석산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다.

대대손손 자리를 지키던 산의 살갓이 벗겨지고 맥이 끊기는 것을, 산이 사라지고 산에 깃들던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피는 물 흘리고 병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산림청장은 예산 대솔 채석단지가 과연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에 유익”한지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라며, 섬김행정을 표방하는 예산군수는 군민의 입장에서 채석단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2019년 4월 26일

예산 대솔 채석단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

감사청구 환경청

1. 15년간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한 면적그대로 승인가능하다는 판단
2. 자연경관 즉 조망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였다.
3. 실사 1회(약2시간실사)로 판단하였다는 점(금강유역환경청)
4. 실사시 피해주민의 피해 사실을 확인 안하였다는 것
5. 소음기준치를 넘어 피해가 오는 소음 측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가 없는점
6. 예산군 고시로 산사태위험지역이 지정 되었으나 위험에 대하여 조치가 없는 점.
7.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우편으로 받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과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과, 현장을 보지 못한 심의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의존 하여 기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대로 평가가 이루어진것으로 보며,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9.삼표기초소재(주)가 소음측정, 미세먼지측정을 맡긴 업체는 소음측정 30여분, 미세먼지측정 30여분으로 기준에 미달하였고, 2018년부터 측정은 소음측정 30여분, 미세먼지측정 약2일정도. 그러나 미세먼지측정기는 애러가 나있는 것을 2년간 사용하여 데이터로서 근거가 없다.
10. 인근 지역 산에 돌가공공장이 2003년도 공장설립을 신청하였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은 불허를 하였다. 그러한데 채석단지지정에 대하여 승인 가능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
- 11.인근 산은 400미터 이상이며, 1급, 2급의 생태보전지역으로 2~3급인 바로 옆 산맥을 절단하여 7등급 하향되었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판단은 너무나 잘 못되었다.
- 12.합의서가 시산1리에 국한되어 80%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었으나, 미세먼지 대기질에 대한 거리는 2.5KM로 대술면 시산1리, 시산2리, 산정리 일부, 궐곡리 1리, 궐곡리2리, 예산읍 향천리, 수철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80%는 아니므로 잘못된 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의견으로 받아들여 승인 가능으로 한 것은 행정이 오판 한 것입니다.
- 13.대술면 시산1리에 23억원 각호당(84세대) 2천9백만원을 지급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았으나, 피행보상에 대한 어떠한 평가가 없이 일괄적 지급은 허가를 내

기위해 뇌물을 주고 합의를 산것이며, 또한 7세대가 반대하고 합의를 안하자 이장은 2억6천만원 즉, 7세대 돈을 회사에서 받았다 찾아가라 시산리 대

동회에서 이장이 말하였다. 이는 삼표기초소재(주)와 이장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

14.협의 기관인 예산군, 충청남도, 충청남도환경보전연구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 가능한 의견은 잘못 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담당과장이 변경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 담당과장은 1년도 안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주민으로써 이해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기에 주민들은 실무과장과 담당자등이 외압이나 다른 것에 의해 허가가능을 내어주고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의혹이 생겨 이렇게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술 채석단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자료목록

- 지역단체 성명서 및 입장문 (첨부)
- 감사청구서 (산림청, 환경부) (첨부)
- 2014구합20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2심 판결문
- MBC 뉴스리포트 <30년째 석산 개발, 주민피해 호소> (강원 양양)
<https://www.youtube.com/watch?v=vuTVG5AMGGA>
- MBC 뉴스K <마구잡이 석산 개발...복구 나몰라라> (전북 부안)
https://www.youtube.com/watch?v=6hE_2qfo1ic
- 대전MBC 시사플러스 <석산개발과 불편한 동거> (충남 공주, 세종)
<https://www.youtube.com/watch?v=2bh46tLeYVE>

대술 채석단지 문제 주요 언론기사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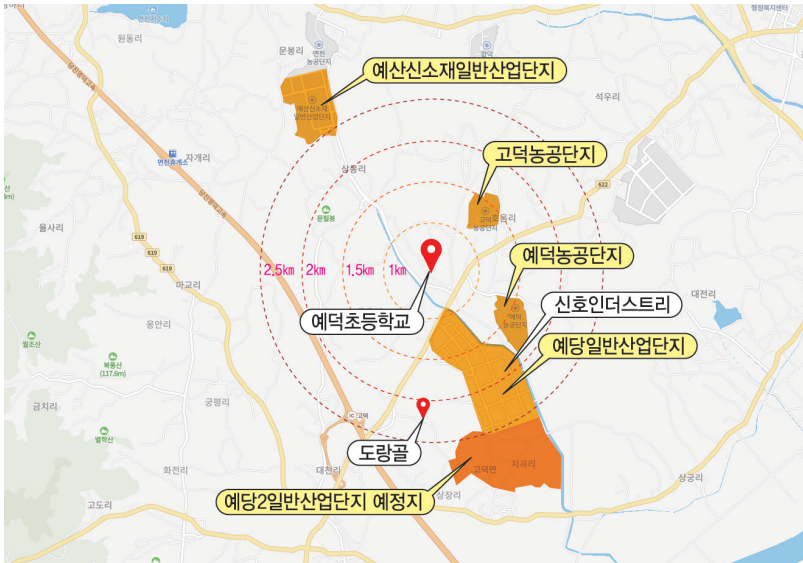
- <‘청정 고새울’에 산업폐기를 매립장이.. 주민불안 확산… 반대서명 돌입> 2011년 5월 30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0>
- <대술 환경오염 유발공장 대책 호소> 2014년 9월 29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26954>
- <대술 석산 지도단속 소홀 추궁.. “적법 앞세워 허가… 적법하게 단속은 안했다”> 2014년 12월 8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7>
- <매립장 · 석산 · 연탄공장 ‘뒤숭숭’> 2016년 1월 25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1>
- <대술석산 38만㎡ 개발 예고> 2016년 2월 1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6>
- <“건강피해 · 환경오염 위험” 예산군, 궤곡2리 연탄공장 불승인> 2016년 2월 15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5>
- <“또 대술이냐” 들끓는 민심, 이번엔 시산리에 레미콘공장 승인 신청> 2016년 4월 11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7>
- <“더이상 못 참는다. 주민들, 공청회서 사업자 성토”> 2017년 1월 9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4287>
- <마을산 채석단지로 팔리나? 시산리, 찬반 분분… 석산 반대투쟁 분수령> 2017년 4월 19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5208>
- <석산민원 돈으로 해결될까? 세대당 3,000만원 조건부 보상… 지역사회 파장> 2017년 7월 3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

- 〈“석산개발은 살인행위” 대술 채석단지 반대 단식투쟁〉 2017년 8월 7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6531>
- 〈“미세먼지에 돌가루까지... 사람이 먼저다” 예산군 대술면 주민 200여 명 산림청 앞에서 ‘석산 개발’ 반대 집회〉 2019년 2월 13일, 오마이뉴스
<http://omn.kr/1hc4p>
- 〈‘채석단지’ 일원 2곳서 산사태, 민가·과수원 덮쳐... 행정이 원인규명 나서야〉 2020년 9월 7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1>

③ 고덕면 일대

고덕 환경현안 개요

고덕면은 2009년 주물단지 조성 문제를 시작으로 환경유해시설이 밀집하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다. 법정공방까지 가고 중간에 대책위원장이 별세하는 등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었지만 2011년 주물단지는 결국 승인이 났고,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 최근에는 이 주물단지 확장으로 또다시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단식농성을 했다. 이후 2015년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고덕면 내에만 총 4개의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으며 합덕, 삼교 등 인근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6개의 단지가 있다. 201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로 마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멈춰있던 폐목재처리시설이 창고를 증축하고 새로운 철강회사가 만들어지는 등 환경오염시설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시설들도 이미 수년째 주민들에게 악취나 소음, 대기오염물질 및 발암물질 등의 피해를 주는 가운데 예당2일반산업단지를 초가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한 도량골은 예당산단 운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마을로 현재 28가구가 거주한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폐목재처리시설, 동쪽으로는 산업단지, 남쪽으로는 신호산업이 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마을에는 냄새가 나고 오염물질이 쌓인다고 한다. 조망권도 없다. 특히 협성폐목재처리시설과는 150m 거리로 아침저녁이면 냄새가 나고 특히 비가 오는 날 더 심하게 냄새가 난다. 신호인더스트리와는 300m 거리, 지난 3월 대기질조사에서 벤젠과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검출된 마을이기도 하다.

고덕지역 환경문제 연표

2009년	11월	예산군, 경인공단 등 주물공단 조성 MOU 체결
2010년	8월	주물단지저지투쟁위원회 결성 (고덕 상몽리, 당진 면천 등)
2011년	5월	주물단지 승인
2013년	6월	정환중 투쟁위원회 위원장 별세
2015년	7월	주물단지문제 대법원 최종 패소
2015년		예산일반산업단지 준공
2016년		몽곡리폐기물처리장 입지 갈등, 전직 이장 자살
2019년	4월	몽곡리 폐기물처리장 사업자, 다시 허가 신청
2019년	4월	예당산단 입주기업 오염물질 배출 적발
2019년	5월	몽곡리 폐기물처리장 릴레이 1인시위
2020년	8월	예당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사업 설명회
2020년	11월	예당일반산업단지 화재사고
2020년	12월	예당일반산업단지 반대 집회 및 시위
2021년	3월	예당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2021년	3월	예당일반산업단지 1급발암물질 벤젠 검출
2021년	3월	예당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 반대 국민청원
2021년	4월	예당일반산업단지 폭발사고 발생
2021년	6월	고덕 오추리 철강업체 불법영업
2021년	9월	고덕 폐목재처리시설 확장 신청
2021년	9월	주물단지(신소재산업단지) 확장 신청
2021년	9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예당일반산업단지

2015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와 몽곡리, 지곡리 일원에 조성되었다. 행정에서는 애초 친환경 기업이 입주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화학약품을 다루거나 유독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다수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산단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년 간 허술하게 관리되었으며, 최근에는 1급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고, 화재, 폭발, 유출사고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조성된 산단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추가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추가로 조성되는 산단은 마을주민 거주지와 매우 가깝고 어느 마을은 절반 이상이 이주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피한데, 그러자면 주민들의 생업에도 영향을 끼친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2009년 예산군과 경인주물공단의 MOU 체결로 고덕 상몽리 48만㎡에 주물공장 이전이 추진되었다.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7년 넘게 반대투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사이 투쟁위원장이 사망하고, 주물공장 예산신소재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꺼려하는 주물단지를 마을 한복판에 두게 되었다. 이런 갈등과 고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폐목재처리시설(00에너지)

오추리에 위치한 00에너지는 폐목재처리시설이자 폐기물재활용 시설로, 폐가구와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임목·목재가공공장 부산물 등 하루 80톤을 고형연료로 만든다. 2007년부터 가동되었다고 하나 최근 10년 간은 운영하지 않아 주민들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최근 다시 가동을 시작하며 반입폐기물 종류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모의 3배 이상의 확장(3배 이상)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과수농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마을과 너무 가까워 행정에서도 증축허가를 반려했다. 집진, 소음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철강회사

오추리에 수소배터리공장이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과 위험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H빔을 만드는 철강회사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4개월째 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의 지도감독이 있었음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도로가 차량으로 점거되어 주민불편이 계속되었다. 특히 H빔을 용접할 때 나는 냄새와 굉음으로 오추리뿐 아니라 인근 몽곡리의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차량이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넘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주민인터뷰

- 1) 마을방문 및 현지조사 : 2021년 7월 16일(화) 오후 2시
- 2) 심층 그룹인터뷰 : 2021년 9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 3) 집회 현장 인터뷰 : 2021년 9월 15일(수) 오전 8시

이00 님 (50대 여성) : 고덕 환경현안에 앞장서는 몽곡리 주민

“절차적인 문제가 크다. 00금속처럼 지정폐기물처리업체도 미리 알려주지 않다보니 입주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들어온 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지역 안에서 금품이 오가고, 협박하고,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게 큰 문제다. 고무 타는 냄새가 수시로 나고 사방에서 소음이 들려오는데 행정에서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니니 가서 민원 넣고 알아보고 하다보면 다른 일을 못한다. 끈질기게 민원을 넣었다. 당시 000 과장이 보건연구소에 의뢰, 측정해서 영업정지도 먹고 과태료도 내었다. 주민들이 끈질기게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것이다. 000 과장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는 냄새가 안 났지만, 행정 담당자가 바뀌니 또 냄새가 나더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고일지, 주민일지도 없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확실히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고(넣는 방법을) 잘 모른다. 또 산단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은 거의 없다.

또 문제는 뭐냐면, 마을이장-공장대표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 문제다.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협의서를 확인해보니 그렇더라. 서로가 돈을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수소발전소도 현재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있는데 00에너지 문제도 생긴 거다.

고덕에 IC가 생기고 길이 잘 뚫려서 좋아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유헤시설이 들어오는 원인이 된 것 같다. 지역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피해 시설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쉽다. 다들 예로부터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고, 특히 이곳은 천주교 순례코스이다. 지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전00 님 (70대 남성) : 도랑골의 환경피해에 대해 소상히 아는 주민

“역한 냄새가 심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여. 우사 소똥냄새는 냄새도 아니야. 뭘 태우는지... 부락마다 돈을 몇백만원씩 줬어. 100만원에서 350만원.

도랑골이 28가구인데 살 수가 없어. 지금도 못 살겠는데 2산단이 들어오면 더할 거 아녀. 첫 번째 검사에서 벤젠 검출되고 미세먼지도 심해. 폐목재 처리하는 데서 부시는 걸 보면 좋은 걸 부시지는 않을 텐데... 숨 쉬고 사는데 아침, 저녁에 더 많이 태워. 비위 상황 정도야. 비오면 냄새가 더 나.

동쪽은 1산단, 그 옆에 2산단 예정지. 남쪽은 제일 냄새가 심한 00인더스트리, 북쪽은 목재폐기물업체. 외지 사람 소유의 대지 임대하던 사람이나 축사 있는 사람들은 보상 많이 받아 찬성. 여기 집 짓고 살고 텃밭이나 일구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차라리 28가구를 모두 보상해주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야.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면 냄새 심해서 무슨 운동을 해. 최00 씨는 딸네 집으로 이주했잖어. 오토바이 탄 외국인 노동자들만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 산업단지에 취업한 사람 한명도 없어.”

이00 님 (70대 남성) :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도랑골 주민

“60, 70대는 전부 약을 먹고 있어. 약을 한주먹씩 먹어. 00에너지 포크레인 등 기계소리가 심해. 마을하고 150m정도 거리야. 동네 뺨둘러 공장이야. 바람 불면 사방에서 냄새와 악취가 들어와. 두통에 어지럽고 구역질 나. 냄새 맡으면 살이 터지는 것 같애. 저리고 아퍼. 손발이 틀어져. 심장, 혈압, 당뇨, 갑상선, 다리저리는 증상으로 약 복용해. 동네 사람들 전부 매일 병원 다녀. 다 죽고 혼자 사는 분들도 7가구나 되는데, 사는 사람도 병원 다니고 약으로 살아.

자식들 서울 사는데 여기서 오라고 못해. 오면 반갑지만 애기를 염려돼서 오라고도 못해. 부모가 살던 데 내려와 산다고 그러는데 권하지도 못해. 동네가 없어질 거 같애. 산단 맞은편에 사는 분이 땅을 내놨어. 몸이 아파서 일 못해. 살기 어려우니 땅을 내놓은 거지. 부부가 병들었어. 공장 들어올 정도도 못되니 땅이 팔리지도 않아. 그런 땅 소개했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도에 민원 넣는 것도 소용없어. 매번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하니 허탈하고 분통터져.”

송00 님 (80대 남성)

“10년 전부터 순천향 병원 다녀. 심장, 호흡기, 전립선 문제로, 4개월치 받아와 복용하고 있어. 가면 검사하고 검사 한 번에 50만원씩 들어. 다들 나이 먹어서 아픈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원망스러워.”

이00님 부인 (70대 여성)

“냄새나고 그래서 밥도 못먹어. 앓아누웠어. 정신없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속 뒤집힌다고 그래. 나는 코에 배어서 몰라. 한달에 한두 번은 영양제를 맞아야 해. 공장에서 뭔가 태울 때는 냄새가 더 독할 때가 있어. 코에 뻐는데도 그럴 땐 못 견딜 때가 있어. 근데 뭐 어떡해. 그러려니하고 살아.”

성00 님 (70대 남성) : 산업단지 조성 시 토지가 수용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곡리 주민

“상전1, 2구, 지곡리, 오추리, 상몽리까지 피해를 본다고 봐야한다. 행정리로는 4개지만 부락으로는 더 많고 고덕면 27개 마을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고덕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3명이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덕은 지금 가까이 4개 산업단지가 있어서 더 안 만들어도 된다. 그 산업단지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그런데 또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공해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주는 공장들을 유치하니깐 반대하는 거다. 정말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 온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냐. 그동안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 게 아니니 믿음이 없다.

(찬성하는 쪽) 사람들은 땅값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흘린 정보들을 믿고 있기도 한다. 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 흘리고 있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3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90대 넘은 양반들도 나와서 하고 있어 너무 어렵다. 농사철에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고덕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 7시에 나와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되는 땅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집이 있어. 그러니깐 결사반대를 하는 거다.”

김00 님 (70대 남성)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주와 고향 상실을 걱정하는 지역리 주민

“그게 참 밖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두유, 실제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자식들은 고향이 없어지는 거 아니어유. 사람이 참 나이 들고 뭐하면은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 아니어유. 마음의 안식처인데, 외지의 살다가 찾아갈 만 한 곳은 고향인데 의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유. 지금까지 흠에서 살아왔는데 보상받은 돈 가지고 이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주를 해서 갈 만한 곳도 없고 큰 문제जू. 문제जू.

이런 상황이 꿈에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जू. 보면 화가 나고 그러जू. 한 부락에서 형님 아우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슬픈 일이죠. 촌에서 같이 의지하고 지냈던 사람들끼리 서로 등지고 대화도 안하고 아는 척도 안 해유. 그니까 가면 갈수록 더할 테जू. 마을행사 이런 건 이제 어려워유. 마을이장 같은 사람이 일 보기가 더 어려운 거जू.

주민들하고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이 시행사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빼와서 계획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동네 부동산 하는 사람 하나하고, 동네에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과 모두 상의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어느 날 갑자기 뭔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유. 그니까 촌사람들이 순진한 거예요. 사업이 멈출 줄 알았지.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말 없다가 계속 절차를 밟아 나갔어. 처음부터 설명회는 그냥 형식적이었던 거지.

사실 이 문제(산업단지 벤젠 검출)가 터지기 전에는 공장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 몰랐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유독물질 나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니 알게 된 거जू. 그 동안도 많이 나왔을 건데 알 방법이 없었जू. 검사하기 전에는 검사할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जू. 그렇지 않아유? 개들이 그렇게 검사한다고 하기 전에 더 나왔을 거예요. 지난 번엔 산업단지에서 톨루엔 그게 한 번 폭발했잖아유.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서서히 드러난 거예요. 주민들이 나서서 이러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군청이 묵인하고 그냥 둔거जू. 폭발하고 문제거리가 되니까 개선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공장은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지. 한 번 들어오면 옮길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돼. 군에서 개선 개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애초에 공장을 인허가 해주고 관리 감독을 못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 해보니 개들(행정)은 그런 일 하고서 물러나면 그만이라유. 그러니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00공장이 제일 이야기 많이 된 공장인데, 우리 마을 입구 언덕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게 원래는 일본에서 공해업체로 퇴출된 기업이라유. 그런 기업을 부품 나사 하나까지 분해해서 고대루 여기에 다시 짓고 공장을 운영한 거래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공장인 줄 몰랐쥬. 냄새 나유. 많이 나유. 근데 기계 같은 걸로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면 그 때는 또 안 난다는 거유. 그 냄새를 어찌 할 방법이 없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유. 그 공장 하나만 있으면 덜한데 계속 확장하고 있어유. 그렇게 넓어진 상태에서 폭발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쥬. 검출되는 수치는 많이 떨어졌다고도 하긴 해요.”

참고자료 1 : 최근 10년 간 암환자 및 사망자 명단

상항 리 현재암환자 및 암으로 사망하신분

성명	성별	암종류	발병년도	사망년도	비고
여	외음종	2011	2011	2011	오장암으로
남	소화관암	2015			폐암으로
여	외음종(외수술)	2019			폐암 외수술, 황신로
여	췌장암		2015		
여	신장암		2009		
여	폐암		2010		
여	췌장암(외수술)	2005	2005		
남	폐암		2009		
여	췌장암		2005		
여	췌장암		2019		
남	췌장암	2015	2020		
여	췌장암		2015		
여	신장 초음파	2015	2020		
남	신장 초음파	2015	2021		
남	폐암	2015	2019		
여	췌장암	2010	2013		
	심장질환		2020		

지곡 리 현재암환자 및 암으로 사망하신분

성명	성별	암종류	발병년도	사망년도	비고
남	폐암	2009	2009	2009	
남	위암	2014		2016	
여	폐암	2002		2010	
여	췌장암	2015		2019	
여	췌장암	2011		2015	
여	간암	2012		2016	
남	폐암	2012		2016	
여	위암	2017		2018	
여	췌장암	2015		2020	
여	췌장암	2012		2019	
여	폐암	2012		2019	
남	위암	2012		2019	
남	위암	2012		2021	
남	위암			2018	
남	위암			2018	

상항 리

[도량골 마을 최근 10년 내 사망자 및 현재 암환자 현황]

사망자	현재 암환자				
성명	사망년도	사망원인	성명	연령	병명
	2019년	위암	송영길	54	혈액암
	2018년	심판두통호스 후 사망	조정진	72	간암
	2017년	위암	송태중	81	신장,방광암
	2015년	장기 녹아 사망	이정식	83	갑상선암
	2014년	폐암	박기분	83	심장병
	2014년	폐암	김중일	69	위암
	2012년	심장마비	김준자	81	중풍
	2011년	위암	박용규	78	뇌졸중
	2010년	간경화	김중길	69	위암
	2021년	뇌졸중			
합계	10명	합계	9명		

X 도량골 전체 세대수 : 26가구

상항 리 현재암환자 및 암으로 사망하신분

성명	성별	암종류	발병년도	사망년도	비고
남	폐암	2016		2018	
여	자궁암	2017		2019	
여	폐암	2015		2020	
남	폐암	2016		2020	
남	간암	2018		2020	

고덕지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자료목록

- 예당2산단 반대 지역단체 성명서 및 입장문
- 예당일반산업단지 인근 마을 암환자 및 사망자 명단
- KBS 대세남 <예당산단 편>
- 충남환경이슈-고덕편 https://www.youtube.com/watch?v=_3l08hmSTCo

고덕 문제 주요 언론기사 목록

- <주물단지 유치, 잘한 일인가> 2009년 12월 20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5>
- <신소재 위장 주물단지 결사반대> 2010년 8월 13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1>
- <친환경 산단, 군 핵심전략 맞나> 2011년 7월 18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18232>
- <환경문제, 인구증가 걸림돌> 2016년 6월 3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0>
- <예당산단 오염물질... 우려가 현실로> 2019년 4월 22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8>
- <오염 여전한데 또 산업단지... “주민 삶 무너져”> 무한정보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0>
- <신소재 확장, 단식투쟁 불사> 2021년 8월 13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52221>
- <예당산단 무분별한 기업유치, 농민 건강 농산물 피해> 2019년 4월 10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1>
- <산업단지에 신소재 산단까지... “공해 속에서 살라고?”> 2021년 5월 24일, 오마이뉴스
<http://omn.kr/1tcx8>
- <“예당2산업단지 찬반 양론? 찬성 주민도 피해자” 대전충남녹색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등 농림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21년 6월 1일, 오마이뉴스
<http://omn.kr/1tl9l>
- <“주민 피해 대책없는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무분별한 횡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 334명, 충남도에 탄원서> 2021년 6월 3일, 오마이뉴스
<http://omn.kr/1tnwq>
- <예당산단 등 공해업체 입주... 주민만 피해> 2021년 6월 21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51677>
- <먼지 소음 피해 줄인다더니... 사업확장?> 2021년 9월 6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52402>
- <고덕 A업체, 수개월째 공장 무단가동... > 2021년 9월 27일, 무한정보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60199>

주민들의 목소리로 확인하는 환경문제, 그리고 인권과의 연결성

작성 : 정수연 ('끝 미디어' 활동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이보다 더 명확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환경이 가지는 의미는 헌법 제 35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환경권은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해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 보장 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휴먼레터 2009년 5월 18일자 중)

우리 헌법만으로도 환경문제가 왜 인권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명실상부 존재함에도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행정, 환경오염 기업, 관련기관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경로는 비슷했다.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게 혹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설명회 이후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마을에 기업 혹은 산업 단지가 들어왔고,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이 지나면서 이웃들이 하나둘 비슷한 질병¹⁾으로 사망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주민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눈을 돌리고 기업 혹은 산업단지가 환경적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진다. 그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1) 실제로 삼고, 대술, 고덕 등 우리가 찾아가 마을의 대부분의 어른신이 정말 실제로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했고, 병에 걸린 분들이 많았다.

10년, 20년, 30년 그냥 잘 지내놓고 왜 이제야?

그럼 다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지내란 말인가?

‘왜 그동안 반대 없이 지내다가 이제야 이러느냐?’라는 질문이 주민들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라고 한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건강에 환경에 악영향을 줄지 몰랐을 뿐인데, 이런 질문을 행정이 하고, 기업관계자가 하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다.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

전반적인 인터뷰를 통해 환경에 위해한 기업, 산업단지 등이 들어올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벌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고덕의 경우 눈에 보이는 화재가 일어나고 위험물질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주민들 입장에서 더욱 화가 나는 건 어떤 지역에 환경유해시설이 생겨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않는 행정우선주의²⁾로 진행되는 부분이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아주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환경유해시설이 생겨나기 전부터의 알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생겨난 이후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야할 행정으로부터 관련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게 일상다반사였다. 주민들에게 더욱 화가 나게 하는 행정의 태도는 하루이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만으로 해당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더욱이 행정이 나와 조사를 할 때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유해시설 가동도 줄어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특히 헬기소음문제, 철도소음문제,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 문제가 섞인 삼교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그때뿐, 아직까지 해당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조사기간 중 고덕의 산업단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행정은 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만 할 뿐, 실제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우선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포기, 단념에서 오는 인권의 상실

지난한 법적싸움에서 이기면 모를까, 만약 주민들이 지게 되면 그 이후의 해당 지역의 공동체는 말그대로 와해되고 만다. 우리가 조사한 대술의 경우 주민들 간의 어떠한 소통도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되어 그저 자연스러운 소멸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또 법적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 마을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등을 지는 과정에서 오는 인간적인 상실감도 매우 컸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인권’은 설 자리를 잃는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제 35조를 되뇌어본다. 아름다운 동요 ‘나의 살던 고향은’ 속 고향은, 밀려드는 공장,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더이상 꽃이 피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산들은 잘려 나가고 잘려나간 그곳에는 각종 폐기물이 묻히고 있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도 관리를 안 하면서 행정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논과 밭을 갈아엎어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건설사는 산업단지를 팔면 그 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해 온 것이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고 한창 바쁜 수확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도청 앞에서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70, 80대 노인들이 나와 피켓시위를 한다. 그 분들이 지키고 있는 건 자신들의 경제권만이 아니다. 후손들의 기본 인권, 환경권을 지키고 서 계신 것이다.

피해주민들의 정신건강 어려움과 스트레스

작성 : 이은정 (열린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당신은 차도 안타고 다니나,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예상 밖의 답이었다. 마을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녀분과 연락이 닿았고 고향에 환경피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간 만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영과는 매우 다른 반응에 좋은 일을 한다고 자부하며 돌아다녔던 나를 적잖이 당황시켰고 부끄럽기까지 했다.

역시 70-80년대를 살아온 발전 지향적 세대의 특징인가?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예민하고 까다롭고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던 순간 머리에 철퇴를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환경운동가 또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낯선 외부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서의 변화

어쩌면 방어적인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포¹⁾를 형성할 시간도 없이 ‘환경운동은 정당하다.’는 태도로 당당하게 그들을 대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관계에 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인터뷰 요청 과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면담을 조심스러워하거나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어 무의미하다고 아예 거절하신 분들도 계셨고 ‘취재하는 목적이 뭐냐’고 다짜고 짜 물어 오신 분도 계셨다.

그렇다. 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1) rapport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라포는 이를 충족시켜주는 동인(動因)이 된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름없다.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할 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조건 끝까지 채우고 보려는 것과 같다. 마지막 단추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해결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적절한 대처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무기력(무능력)을 경험하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라고 살아야지 어떡해.”

“그냥 살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여.”

“그러려니하고 살아.”

“사는 재미가 없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상실, 실패, 무능력 등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자동적사고²⁾ 한다. 주로 인지삼제라고 하여 자기 자신, 자신의 주변 환경,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작은 직접적으로 환경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원망과 분노가 여전하다.

“화가 많이 났어(눈물). 너희들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야. 녀들은 개돼지다 그러는 거지.”

“성질나고 욱하고 쫓아가게 돼. 혈압 올라.”

“매번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하니 허탈하고 분통터져.”

“다들 나이 먹어서 아픈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원망스러워.”

그 사이에 주민 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실망과 배신감과 박탈감과 신체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2) 자극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순간적,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역기능적인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

“사는 사람도 병원 다니고 약으로 살아.”

“주민들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바람불면 사방에서 (냄새와 악취) 들어와. 두통, 어지럽고 구역질 나.”

마을과 주민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텃밭이나 짓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

“동네가 없어질 거 같아.”

회환과 회피로 이어진다.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한 부락에서 형님 아우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슬픈 일이죠.”

“귀향하고 싶어 마을 안부를 물어오곤 하는데 주변 환경오염 이야기 듣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 종종 있어 안타까워.”

“무분별한 공장 진입으로 식수난 문제와 공기 등 환경문제로 들어오는 것 (귀향)에 고민하게 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게 돼.”

또한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열감이 붉어지며 사지가 떨리고 두통, 복통 등과 같은 신체반응이 동반되는 정동과 충동, 생활 스트레스를 넘어 신경증적 증상들이 반복되어 약물을 복용하기에 이른 듯하다. 지속적인 신체적 불편감은 2차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마련인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반복되고 있다.

욕구와 요구

“그럴 줄 알았으면....” 주민들의 발언 말미에 자주 등장하는 워딩이다. “환경오염이 될 줄 알았으면...”, “주민들과 사이가 멀어질 줄 알았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줄 알았으면...”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의 언어 이면에는 욕구³⁾가 숨겨져 있다. 매슬로우Maslow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

3)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간은 마땅히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고 했다. 사랑을 주고 받고자 하는 욕구, 집단에 소속되어 소외되지 않으려는 소속의 욕구,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적 욕구,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이다.

요구는 무시되고 묵살되어 허탈감으로 돌아온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속대로 하겠다하고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소외감을 넘어 패배감마저 든다.

“주변 주민들은 이미 다 손을 쓰고 잘 모르는 사람들만 데모하러 다녔어.”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헌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도 말이다. 마땅히 “환경”과 “사람”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환경문제>의 중심에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실이며 환경취약지역 세 곳의 사례가 그 증거다. 시민들은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결과를 아는 것도 힘들다. 그런 답답함과 무시당 하는 기분은 분노로 발전한다. 주변의 작은 변화나 지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쌓이고 쌓여 삭발을 감행하고 일인시위를 하며 관계 부처를 찾아가 단체행동을 하는 등 주민들을 투사를 만든다. 수십 년간 문제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서서 해명해주는 이도 없다. 조사를 요구했으나 일시적일 뿐 믿음만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납득시켜주는 곳도 없다.

7살 아이가 다투어도 각자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따져 서로를 이해시킨다. 가능하면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배웠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오염물질이 방류되었는데 행한 사람은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있다. 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거를 들고 와야 얼굴이라도 보여준다. 중재하는 사람도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하지만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다. 그 사이 이웃들은 다른 동네로 떠나고 서로를 불신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를 잃었으며 어떤 이는 목숨마저 잃었다. 남은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외로움, 회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진작 그렇게 하지.

켜어 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도 실험과 연구를 반복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들은 사전에 미리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선택하고 싶어 한다.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선택은커녕 피해당사자로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결과를 알기도 어렵다.

한 주민은 ‘한동네 사람 아니면 관심도 없다.’고 하소연 한다. 몇 안 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으니 힘을 보태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말이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기업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다. 민간인이 모든 과정을 알고 대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정부기관이 있고 전문단체가 있고 행정처가 있는 것 아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잡아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그것이 위로이고 그것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구체화하여 제도로 만들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모두가 신뢰하고 받아들여 분쟁을 줄여줄 것이다.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예산의 환경취약지역 세 곳은 무엇이 닳았나.

- 환경취약지역 세 마을의 공통점과 시사점 -

작성 :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삼교와 고덕, 대술이 모두 다른 환경현안을 안고 있지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공통점은 우리가 조사한 세 지역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겪고있는 모든 소도시 농촌마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환경이 오염되면 몸도 마음도 아프다.

“동네 뺑둘리 공장이야. 바람 불면 사방에서 냄새와 악취가 들어와. 두통에 어지럽고 구역질 나. 냄새 맡으면 살이 터지는 것 같애. 저리고 아파. 손발이 들어져.” (고덕 도랑골 주민)

“내가 시산리서 나고 자라 79년을 살았는데, 석산이 들어온 뒤로 한 집 걸러 한 집에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3~4년 사이 암환자가 13명이나 생겨서 70호 가운데 20%가 암환자야.” (대술 시산리 주민)

“냄새날 때는 밥도 못 먹어. 앓아누웠어. 정신없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숙뒤집힌다고 그래.” (고덕 도랑골 주민)

“최근 몇 년 사이 일곱 분이 폐암,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방이 안 좋은 가스를 내뿜는 시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 모양이 분지이다 보니 오염물질이 고여 그런 것 같아요.” (삼교 효림마을 주민)

환경오염시설이 마을 가까이 위치하고 오랜 시간 운영되면서 물과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넘어 건강상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있는 곳에서는 어지럼증과 호흡기질환을,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난청과 두통을 공통으로 호소한다.

다. 삼교 효림마을은 최근 몇 년 간 일곱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예당산 단 인근의 상장리, 지곡리 역시 최근 10년 사이 폐암과 뇌질환 환자 및 사망자가 다수 확인되었다. 대술 채석단지의 경우 매일 1회 발파로 분진과 돌가루로 인한 건강 피해가 예상된다. 대술 시산리 주민 발언에서도 확인되지만, 실제로 홍성군 갈산면 석산이 있는 대사리의 주민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암”이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채석단지, 석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간은 채석단지 운영과 관련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돌가루(석분) 때문에 불투명 회색빛을 띄고 있고, 수질오염 심각해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수질조사와 그에 따른 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화학비료공장이 있는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 소각장이 밀집해있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 일대 주민들의 건강이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산 3개 지역의 경우 그간 별도의 건강영향조사는 없었다.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고 비슷한 증상이 있고 또 암으로 사망하는 이웃이 있다보니 주민들 스스로 답답해 누가 아픈지 누가 왜 죽었는지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고 수시로 폭발, 유출 사고가 나는데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상식적인 절차와 주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에

“88년도 공장 시작할 때 헬기 부품공장으로 안내하고 주민들 수십 명 취업시켜 준다더니 취업한 사람 한 명도 없고 허가 받은 후 헬기 수리장으로 변경했어. 애초에 이런 시설인 줄 알았으면 반대했겠지.” (삼교 효림리 주민)

“민원 넣으니까 조사만 몇 번 하고 갔지 그 결과가 어떻다 말도 없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아냐. 안 좋은 게 나왔다는데 기준이 안 된다고 하니 뭐 할 말이 있어?”(고덕 도랑골 주민)

“절차적인 문제가 커요. 삼지금속처럼 지정폐기물처리업체도 미리 알려주지 않다보니 입주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들어온 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덕 몽곡리 주민)

주민들하고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이 경험 있는 시행사 사람을 빼워서 계획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동네 부동산 하는 사람 하나하고, 동네에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과 모두 상의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고덕면 지곡리 주민)

“동네 바로 앞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데 군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고덕 몽곡리 주민)

환경오염시설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절차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는지 허가 전에 마을에 상세히 공지가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행정 모두 주민 민원을 우려해 그런 과정을 생략하거나 축소해온 게 사실이다. 어떻게든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입장이다.

예산 덕산면의 한 세탁공장도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버려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삽교천 최상류에 위치한 1급수 하천으로 그간 주민들이 가꾸고 보호해왔는데, 세탁공장이 들어서 수질오염과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세탁공장이라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동의나 공식적인 안내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마을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성군 갈산면의 채석단지 역시 석산에서 채석단지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앞으로 20년 이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허가 신청 뿐 아니라 그간의 어떤 절차나 과정도 공개된 적이 없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30년을 보낸 것이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 때는 ‘친환경기업’만 입주하게 한다더니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왔다.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으니 주민들은 무시당

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과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단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하천과 논에 기름띠가 생겨도 주민들이 찾아가 묻지 않으면 그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예산일반산업단지에서는 정체를 모를 기름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관리사업소를 찾아가고 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이후 또 다른 유출사고가 이어졌다.

사업허가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 이전에 해당 마을과 주민에 공개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과정에서도 수질이나 대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마을은 분란

“한 부락에서 형님 아우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슬픈 이유. 촌에서 같이 의지하고 지냈던 사람들끼리 서로 등지고 대화도 안하고 아는 척도 안해요. 마을행사 이런건 이제 어려워요. 마을 이장같은 사람이 일 보기가 더 어려운 거죠.”(고덕 지곡리 주민)

예산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일부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 그래서 반대집회가 있는 날에는 한켠에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맞불집회도 열린다.

대술 채석단지는 애초 운영되고 있던 석산이 위치한 시산리를 넘어 이웃한 켈곡리와 대술면 전체가 반대했지만 마을땅이 팔리고 사업자의 합의금이 오가는 가운데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 불편함과 상처가 마을에 남았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던 대술면 켈곡리는 찬성하는 마을과 반대하는 마을로 나뉘었고 이장을 해임하고 다시 뽑는 사태까지 있었다. 역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던 고덕면 몽곡리는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지역주민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환경오염시설이 아무 문제가 없거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고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농사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우니 가지고 있던 땅을 (어디에든) 팔아야 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 약취 나고 소음 있는 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농촌현실과 팍팍한 삶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산업단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쥬.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깐 유독물질 나오는 게 밝혀져 알게 된 거죠. 사실 그 동안 많이 나왔을 건데 알 방법이 없었쥬. 검사하기 전에는 검사할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쥬. 그렇지 않아요?” (고덕 지곡리 주민)

“주민들은 여직까지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치 않는다. 허가 기간인 2021년까지만 개발하고 그 뒤로는 석산에서 손을 떼고 떠나라” (대술 시산리 주민)

산업단지도, 헬기정비공장도, 석산도 “우리 지역에는 조금 피해가 되겠지만 다 국가에서 필요한 일들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30년을 참아왔다.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안 좋은 시설을 군에서 이렇게 마을 가까이 허가해주겠나.” 하는 신뢰도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쩌겠나.” 하고 반대할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후회하듯 이야기한다. 석산은 15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허가를 연장하고 또 연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채석단지로 허가를 받았다. 홍성군 갈산면의 석산 역시 연장을 거듭해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최근에 채석단지 허가를 신청했다.

헬기정비공장 소음과 약취가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곧 서산 공군비행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한 게 벌써 수년이 지났다.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었다고 한다. 2009년 행정이 사업자와 맺은 협약으로 고덕에 주

물단지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년 동안 반대투쟁을 하고 그 사이 대책위원장이 별세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물단지는 확장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단식을 했다. 설치된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더 확장되지 않았다면 주민과 행정, 사업자 간 최소한의 신뢰는 유지했을 것이다.

주거권, 노동권, 재산권은 어디에?

“냄새나고 시끄러우니까 밭에 나가기가 싫어.” (삼교 효림리 주민)

“수십 차례 석산을 드나드는 대형차량이 가마고개로를 다녀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덤프차들이 뽕뽕대면 굉장히 무섭다” (대술 곶곡리 주민)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면 냄새 심해서 무슨 운동을 해. 최00 씨도 딸네 집으로 이주했잖아.” (고덕 도랑골 주민)

“지금까지 참 흙에서 살아왔는데 보상받은 돈 가지고 이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주를 해서 갈 만한 곳도 없고 큰 문제जू. 문제जू.” (고덕 지곡리 주민)

수용되는 땅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 집이 있어유. 그러니깐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덕 지곡리 주민)

삼교 헬리콥터정비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은 자식네로 거처를 옮겼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헬기가 뜨면 일을 멈추고 대피해야 한다. 산업단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하천을 따라 논까지 왔지만 원인을 모른다니 보상은커녕 따질 곳도 없다. 채석단지 가까이서 과수농사를 짓는 주민은 사과 잎과 열매에 돌가루가 뿌얏게 쌓여 생장에 영향은 없을지 사과가 팔리기는 할지 걱정이다. 돌과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이 실새없이 드나들다보니 마을 가까운 도로는 늘 파이고 갈라져있다. 큰 차량이 통행하니 위험한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2020년에는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간다는 소문 때문인지 땅값이 하락하는 건 물론 땅을 팔기도 어려워졌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땅이 전

부인데, 여기서 살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산단 맞은편에 몸이 아파서 일 못해 못 사니 땅을 내놓은 분이 있어. 부부가 병들었어. 공장 들어올 정도도 못되니 땅이 팔리지도 않아. 그런 땅 소개했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고덕 도랑골 주민)

환경오염시설 도미노현상

“개떡같은 것들만 대술로 온다.” (대술면 대술읍 주민)

“채석단지 있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듯. 농은리부터 채석단지 사이에 공장들이 많이 늘었어.” (대술 꺾곡리 출신)

2016년 꺾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로 대술면을 드나들다가 나란히 붙은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연)탄공장 결사반대’,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대술땅에 폐기장은 절대 안 된다.’, ‘레미콘공장은 절대 안 된다.’ 모두 대술면 꺾곡리가 사업지이다. 바로 옆동네 석산이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오염시설들 참 예의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환경오염시설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유해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낮아진 곳으로 평가되어 다른 유해시설 설치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예산 꺾곡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토석채취장, 골재생산장, 폐비닐재활용공장, 축사, 토사채취장, 공동묘지 등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위 토석채취장은 그 면적이 25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인바,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은 일정 수준 이상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다른 유해시설도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고덕 산업단지나 삼교효림리도 마찬가지 이유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소홀한 관리감독과 도움 안 되는 ‘기준치’

“고무 타는 냄새가 수시로 나고 사방에서 소음이 들려오는데 행정에서 알

아서 챙기는 게 아니니 가서 민원 넣고 알아보고 하다보면 다른 일을 못한다.”
(고덕 몽곡리 주민)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쥬.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군청도 묵인하고 그냥 둔 거쥬. 폭발하고 유독물질이 나오고 하니깐 개선안을
만들고 있지만” (고덕 지곡리 주민)

“기름 유출된 적 있어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했어. 두 번째 유출사고, 몇
톤은 될 걸로 추정되는데 조치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경찰조사 요구해서
행정이 움직였어.” (삼교 효림리 주민)

“이런 공장은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지. 한 번 들어오면
웁길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돼. 군에서 개선 개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애
초에 공장을 인허가 해주고 관리감독을 못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 해보니 개들(행정)은 그런 일 하고서
물러나면 그만이래유. 그러니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고덕 지곡리 주
민)

“시끄러워서 다들 귀가 먹었는데 그것도 기준치 이하라 문제가 없다. 귀가
시끄러운데 평균을 내야 한다나.” (삼교 효림리 주민)

“환경문제에 대한 사고일지, 주민일지도 없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차지이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확실히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사실 산업단지가 문제라고 해도 사업자의 부담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고덕 몽곡리 주민)

사업을 위해 주민을 설득할 때는 ‘관리만 잘 되면 문제 없다’는 게 대부분
사업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막상 들어오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문제는 없
는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
정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지도단속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고 철
저하게 조치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시설은 주민이 접근
하거나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고 난 후’가
아니라 ‘상시에’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예산일반산업단지에서는 8월 초 기름
유출사고가 났는데 제때 조치하지 않아 인근 논에 기름띠가 유입됐고 주민들
의 요구로 경찰수사까지 요구했으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을 못 찾

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기준치’이다. 세 지역 모두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호소하면 ‘기준치 이하’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기준치 이하, 벤젠이 유출되어도 기준치 이하,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어도 기준치 이하다. 일시적인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어도 연평균으로 하면 기준치 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은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다. 청양 비봉면 강정리의 경우도 폐석면광산 위에 운영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부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기준치인 1% 이하라 괜찮다는 식의 결론이 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적이 있다. 기준치는 관리수단이지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소멸과 ‘고향소멸’

“친구들이 태어난 곳이니까 귀향하고 싶어 마을 안부를 물어오곤 하는데 주변 환경 오염 이야기 듣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어 안타까워. 친구와 함께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면 좋을텐데...”

“자식들 서울 사는데 여기도 오라고 못해. 오면 반갑지만 애기를 염려돼서 오라고도 못해. 부모가 살던데 내려와 산다고 그러는데 권하지도 못해. 동네가 없어질 거 같아.” (고덕 도랑골 주민)

“지역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피해시설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피해 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쉽다. 다들 예로부터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고, 특히 이곳은 천주교 순례코스이다. 지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고덕 몽곡리 주민)

환경오염시설,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도 살기 어렵고 당연히 인구 유입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무한정보신문 2016년 6월 3일자에는 “환경문제, 인구증가 걸림돌”이라는 기사가 대술, 고덕의 현안과 함께 실렸다. 산업단지나 공장이 많은 곳은 인구유입이 줄고 유해시설이 없는 곳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었다는 내용도 있다. 자녀들조차 내려오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누가

와서 살 수 있을까. 환경현안이 있는 이 세 지역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곳은 아니었다.

세 지역 주민들 모두 “이런 시설들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마을 참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라고 강조한다. 주민들은 아프고 점점 늙어가고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그러다보면 기반시설이 사라지고…, ‘지방소멸’이라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방소멸보다 서글픈 일은 ‘고향소멸’일지도 모르겠다. 태어나 평생 살아온 곳이 오염되고 사라질 지경에 놓인다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뿌리가 사라지는 심정이 아닐까.

“밖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두유. 실제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자식들 고향이 없어지는 거 아니어유. 사람이 참 나이들고 뭐하면은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 아니어유. 마음의 안식처인데, 외지에 살다가 찾아갈 만한 곳은 고향인데…, 의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유.” (고덕 지곡리 주민)

관련 전문가 의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농촌지역 소규모 오염시설의 현황에 대한 판단과 관리상의 문제점

백도명

녹색병원 직업병·환경성질환센터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석좌 연구원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상의 부담이 지역 현안으로 제기되는 곳은 대규모 산업단지 이외에도 전국에 걸쳐 산재한 소규모 오염시설로 인한 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역언론은 물론 중앙언론에도 보도된 곳들로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 마을, 전북 익산 장점마을, 전북 남원 내기마을, 경북 의성 쓰레기산, 보령 공군 사격장,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안양시 연현마을, 동해시 향만 주변마을, 마산 석곡 일반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의 소규모 오염시설로 인한 문제제기는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이 건강영향을 야기한다는 판단은 크게 보아 오염활동으로 인한 변화가 건강영향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통계적 연관성), 특정 요인 혹은 방식을 통해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기전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따로 확인된다는 점(재현성), 그리고 의심되는 기전을 바탕으로 한 대안의 유무와 방식에 따라 이후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개입성) 등에 근거하여 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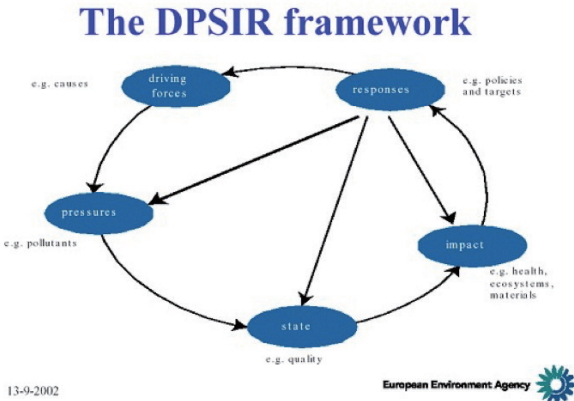
- 오염원으로부터 지역의 공간적 배열 및 근접성과 건강영향의 정도 차이
- 오염 시작과 진행의 시간적 간격에 따른 건강영향 발생 양상의 변화
- 오염 양상과 그에 따른 기전적 설명 가능성과 재현
- 기전적으로 의심되는 오염활동 및 조건의 개입에 따른 변화 여부 및 양상

그러나 환경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이러한 판단기준의 일반적 원칙과 상관없이, 실제 학술적, 행정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의 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통합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그 해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용되는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판단틀 혹은 판단체계는 매우 부실한 상황으로서, 아래에 그 부실함의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 학술적 인과관계 판단의 현황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 여부와 그 기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매체로의 방출, 그리고 그러한 매체와의 접촉과 활동으로 인한 노출, 그리고 노출된 사람들에서의 신체 반응 및 건강상의 변화 등을 연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물질이 오염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배출되면서 인체가 이에 노출되고 반응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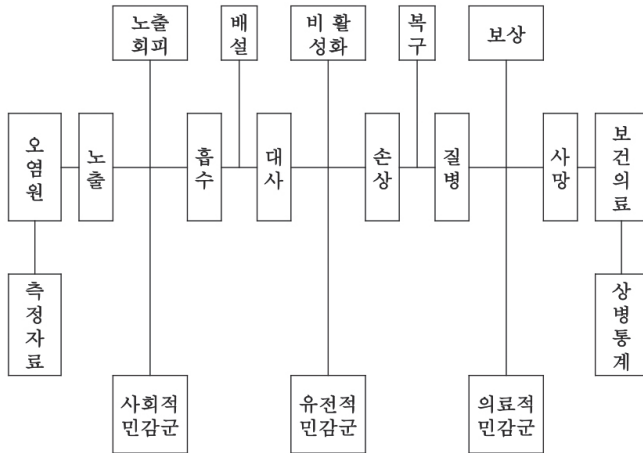
환경보건문제의 발생체계



현재 시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건강영

향이 문제되는 사람들까지의 노출경로와 양상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즉 환경 속의 삶의 방식과 문제지점들에 대한 확인이다. 나름 설득력이 있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기될 수 있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가능성이 훨씬 구체적일 것이라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여러 다양한 양상과 그 확인 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가 지역 현장과 관련 없는 지점과 분야에서만 문제를 조사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즉 꼬끼리 다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학계는 꼬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실제 꼬끼리의 생각 및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은 단지 좀 더 돈을 더 들여서 꼬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사회적 민감군을 포함해 전체를 살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특정 유해물질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과정에 유전자의 활성도가 변화하고, 그로 인한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대사과정 전체가 변화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로는 꼬끼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감군만을 놓고 유전자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지엽적 논의만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5년, 10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국회와 언론에 주요한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을 실제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문제 위주로 소진시키고 있다.

2. 행정적 인과관계 판단의 현황

행정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리는 크게 보아 중앙정부에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 생성 및 검토에 근거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관리가 위임된 소규모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허가, 등록 등 일련의 서류 작성 위주의 행정조치를 통해 접근하는 관리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오염시설의 경우 그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방식의 행정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오염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문제가 아주 정교하게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저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도식적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다.

2.1. 환경영향평가의 허실

예를 들어, 채석단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발파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직접적 채석활동으로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음과 분진의 발생을 완화시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효능에 대한 평가는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추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소음과 분진이 실제 현장에서 관리되는 방식과 도식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 사이에는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그 이외 직접적 채석활동이 아닌 여러 가지 변화들은 전혀 그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큰 틀에서 채석 활동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쌓아 놓거나 혹은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과정, 트럭 등 운반수단과 이송수단의 증가, 그로 인한 도로 파손, 강우에 따른 먼지 및 토양의 광범

위한 운반/확산과 이동한 지점에서 말라버린 후의 재비산, 그리고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들은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폭우나 다른 기상재해로 인한 추가 손상 가능성, 산지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및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그에 근거한 행정판단은 그 규모가 크건 아니면 작건, 단지 행정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2.2. 핑계치로서 기준치의 역설

현재 행정규정 상의 기준치는 그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고민이 없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매우 피상적이며 도식적인 행정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에 근거한 관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만을 강조한 관리가 되곤 한다.

즉 기준치는 측정을 통해 도출된 환경 매체에서의 오염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하지만, 환경 자체가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 그에 대한 측정 또한 그 정확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의 의미가 안전과 건강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현실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적용과 강제 의 의미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치와 기준치의 단순 비교를 통해 내리는 판단이라면, 그러한 행정처분은 매우 도식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기준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시간적 공간적 가변성, 측정 방법과 측정자의 경험 등에 따른 정확도,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오차 범위의 의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환경 측정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추어에게 행정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3. 법적 인과관계 판단의 현황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을 놓고 법원의 판사를 통해 어떠한 의견이 더 합리적이며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적, 법적 요건 및 논리를 그 배경에 깔고 함께 고려하는 판단이라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하는 서로 다른 주체들의 의견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다. 즉 두 주체들의 의견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 그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내리는 판사들의 종합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에서 해당 문제를 기술하는 주체들과 이들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판단을 상당인과관계라는 원칙하에 내리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관계의 어떠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상당한 인과관계인지, 그리고 그러한 확인을 어느 주체가 책임지거나 혹은 입증해야 하는지, 실제 원인발생으로부터 결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만하며 정의로운 해결에 혹은 사건의 향후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확인 방안과 근거는 무엇이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원은 매우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판단은 많은 돈을 들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이를 나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입장을 잘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 주체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그러나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행정적 판단, 여러 조사 및 측정을 통해 종합되었지만 혼란스럽고 잠정적인 가정에 머무는 학술적 판단, 그리고 상대방 주체의 배경과 입장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 속사정이 감추어져 있는 사회적 판단 등을 통해 법정에서는 사안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실제 문제해결에 무력하기만 한 학술적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적 판단이라고 하나 그로 인해 속살이 드러나는 관료주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법적 판단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 주체들

의 의견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과 향후 지속될 관계에 대한 기대 등등이 궁극적으로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며, 행정 책임자의 소신도 아닌, 법관의 환경에 대한 평소 의견을 법률가들 간의 체면으로 치장한 판단이 되곤 한다.

4. 현장에서의 사회적 인과관계 판단의 현황

현장에서도 환경오염을 둘러싸고 그 인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이 개발이라는 명목을 업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의 서로 다른 주체들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 현장은 소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현재 삶의 위치에서 개발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보는 경우, 매우 극단적인 대립이 펼쳐지기도 한다. 심지어 마을 떠나 여러가지 구진 일들을 겪고 있다가 고향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돌아와 개발을 찬성하는 집단과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이 떠나 마을을 계속 지키면서 생태와 환경에 의존해 나름의 삶을 유지하는 집단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며, 부모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위협하는 자식, 떠나간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부모 간의 갈등 등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정한 규정을 악용하여, 지역에서 환경을 궁극적으로 훼손하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토호세력이 있는 경우 특히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활동으로 생기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처리 비용을 재활용에 비하여 매우 높게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악용하여, 지역에서 가동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하여, 실제로는 불법 소각이나 불법 매립을 주민들 모르게 밤중에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의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은 이러한 오염을 야기

하는 개발을 바라보는 각자 삶의 위치와 전망,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그 판단이 다르게 된다. 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 가장 오래 거주하는,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곳이 현장이기도 하다.

5. 현장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을 법적, 행정적 인과관계 판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안들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간 연관성의 구체적 양상과 상관없이, 행정적, 법적 판단은 동떨어진 방식으로 자체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적 판단의 방식과 근거, 그리고 법적 판단의 방식과 근거는 현장의 실제 문제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고민과 유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현장에서 사회적 여론을 통해 형성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법적, 행정적 인과관계의 판단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크게 보면 현재 어긋나고 있는 지점에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는지, 그러한 근거가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이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 근거와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편 판단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름 판단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

5.1.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것

인과관계란 사람이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려는 실용적 사고틀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사고틀로서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어느 한 가지 모델 혹은 기전으로만 정리되지 않고, 일대일, 일대다 혹은 다대일, 내지는 거미줄 같은 관계 등으로 계속 변화 혹은 확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간 사고의 문제예측과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사고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인과관계라는 주제에 포함되는 문제들이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이 건강영향을 야기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또한 그 동안 변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변화라 할지라도, 환경오염이 오염원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그 취약성이 중첩되는 민감군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연관성, 재현성, 그리고 개입성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내지는 그 연관성, 재현성, 그리고 개입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문제까지 설명하고 해결하려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인과관계에 따라 확인되고 그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적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검토받을 것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거나, 그 판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이해가 복잡하거나 크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절차 없이도 쉽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빈약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그 인과관계를 강력히 의심하는 경우에만 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빈약하고 불분명한 현실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판단의 최종적인 목적과 근거를 나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다른 설명 가능성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연관성, 재현성, 그리고 개입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연관성, 재현성, 개입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부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나리오 이외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라지는 사회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또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제시되는 인과관계에서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연관성, 재현성, 개입성의 근거가 나름 있지만 서로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의 근거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또한 밝혀야 한다. 그럼으로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상황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설명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법정은 단지 법적 규정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법기술자들의 친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의 근거, 과정, 그리고 판단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행정적 판단에서는 현재 행정처분 혹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주기적 검토와 검토에 따른 개선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 상의 사전적 판단 근거들을 환경이 개발된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에 따른 변화가 초래할 환경과 공정의 변화 중에 예상되는 노출수준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노출수준의 추정,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영향의 추정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이론적 논의만으로 추정의 정확도나 적절함을 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전적 추정과 사후적 평가가 어떻게 왜 다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허가받지 못하는 사업이 현재 없다는 점에서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다.

5.2. 대안의 가능성들을 준비하도록 할 것

평가, 판단, 그리고 처분은 항상 책임을 묻는 혹은 면제하는 결정들이다.

여기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원인이 작동된 상황에 대한 대안적 상황을 도모하거나 먼저 시도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판단한다는 것으로서, 문제의 원인과 함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체계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책임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인이 작동하는 체계에 대한 대안적 체계가 여러 지점에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와 함께 대안을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제 문제의 규명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의 대안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감시 및 문제제기 방안
- 보호 장비 및 시설
- 보상 정책
- 이주 정책

5.3. 참여와 역량강화

이렇게 현장에서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이 요구되고, 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나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문제가 확인되고 해결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화이어야 한다. 여기서 시스템은 주체들, 특히 피해자, 개발자, 행정책임자,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정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이런 점에서 연결되는 주체들, 그리고 그 연결의 범위와 되먹임되는 방식이 바뀔으로써, 전체 유지되는 환경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변화이다.

결국은 모든 피해자, 소수자 및 변방의 주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땅을 지키는 농민들의 싸움

장정우 /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

땅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패배 내지는 후퇴가 생생하게 담긴 기록을 읽게 되어 마음 아프다.

격렬히 싸우는 전사의 목소리가 아닌, 기나긴 싸움에 지쳐, 승리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은 목소리기에 더더욱 그렇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에서는 농지를 산업단지로, 아파트로 만들고 농민을 농지에서 축출해내는 길고 긴 싸움이 이어졌다. 그 결과 1990년 210만 8천 ha였던 농지는 2020년 156만 5천 ha로 감소했다.

특히 논외의 경우 134만 5천ha에서 82만 4천ha로 38.7%가 감소했다. 1990년 대비 26% 논밭이 땅에 묻혔다. 2009~2018년의 10년 동안 감소한 농지의 14.5%가 광·공업시설로 인한 것이었다. 충남에서 최하위 가동율(60%) 기록하고 있는 예산에서도 산업단지 등의 공업시설은 농지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농사/농민의 쇠퇴는 경제학 서적에 쓰인 대로 1차 산업에서 2차, 3차 나아가 6차 산업으로의 직선적 인 발전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닌 뿌리뽑힘이다. 뽑힌 사람도, 뽑은 사람도 결국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지식을 잃게 돼 모두가 패배하고마는 싸움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대지를 어떻게 돌보고, 가꿔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잃어가고 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지식의 상실은 맥락의 상실로 다가온다. 우리는 더 이

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어디에 사는 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조건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타당한 행동인지 묻는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돈이 되는가?”, “수익률은 얼마인가?”,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무엇을 또 팔 수 있는가?”

사회의 잣대를 ‘타당성’으로 돌려놓으려는 방법 - 농촌을 지키고, 더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농촌 지역의 전면적 환경 피해조사 시행

도시에서 외부화된 각종 유해시설이 밀려오는 농촌. 그러한 행태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실제적 피해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피해 지역의 환경 피해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해 구체적인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피해 인과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야 결정권자들이 행동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역학조사(피해조사)를 청원한 지역은 대구시 안심동(연탄공장), 청주시 북이면(소각시설), 천안시 장산5리(필름공장), 익산시 장점마을(비료공장), 인천시 사월마을(폐기물처리), 강원도 송정동(동해항), 횡성군 양적리(가축분뇨처리시설) 이상 7곳이다(부산 생곡동 청원 중도 취하). 그리고 7건 중 4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었고 대구 안심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두 곳은 인과관계를 인정 받았다. 조사를 바탕으로 익산시 장점마을은 해당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피해역학조사,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의 개념을 “건강영향조사는 산업단지,

폐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을단위 협의권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이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마을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걸 아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창구인 설명회와 공청회가 가진 문제도 있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편 중 하나가 협의권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사업 실행 중에 잡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개별 주민의 동의율에 근거한 사업추진은 마을공동체의 분열을 낳을 뿐이므로, 개인 혹은 가구별 동의를 아닌 자연부락(마을) 단위 내지는 자치회 단위가 협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이 끊어진 채 이윤만을 쫓아 달리는 기업들과 여전히 마을·이웃 그리고 땅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들 중 누가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 누구의 판단이 더 존중받아 마땅한가. 수십년 간에 걸친 피해 이후에도 이들은 이곳에 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이곳에는 사람이 산다.

채석단지, 헬기정비공장,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환경문제 종합세트

삽교와 대술, 고덕 농촌마을에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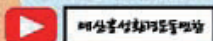
농촌+면 단위+환경취약지역+주민인권 실태조사

조사결과 발표 팟캐스트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삽교 효림리 마을회관 앞 온라인 생중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조사결과회 예고편 영상과 팟캐스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정수연 꿈 미디어 기록활동가
이은정 열림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야기 손님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들 활동가
정남수 예산군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홍중기 삽교 효림마을 주민
심규용 대한성공회 예산성당 신부
구성현 예산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꼭 봐야하는 사람 : 농촌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빚지고 있는 사람

실시간 팟캐스트 시청으로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께는
예산지역 카페 음료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마련을 위해 신청해주세요. 문의 신은미 010-6209-4121

환경피해기록단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OGD△M 인권재단사람

본 조사활동과 발표회는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비로 진행되었습니다.